

정책18-1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2018. 10.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수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연구원)

자문위원

금미숙(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장 · 교육연구관)

김재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대표)

이주연(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상환(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발간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세부영역(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절차·참정권 등) 별로 구분하여 부당한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인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부족한 행정적 지원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을 장애학생과 짝을 짓거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가한 학생들을 적절히 처벌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연합뉴스, 2016).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에이블뉴스,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상충내용에 대해 개정·삭제·신설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별의 정의, 교육 관련 국내외 차별 사례 등을 문헌조사하였으며 교육 관련 장애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0인의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여 개정·삭제·신설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개정·삭제·신설안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영역 1(입학·전학·



전입·편입) 4개, 영역 2(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5개, 영역 3(정당한 편의) 7개, 영역 4(평가·진단·시험) 5개, 영역 5(기타) 1개에 대한 개정·삭제·신설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설계와 발전을 위해 귀한 자문 의견을 주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위원회 김형수 전문위원,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 금미숙 팀장·교육연구관, 사단법인 두루 장애인권 전담 이주연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상환 사무관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결과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개정·삭제·신설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유용한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경숙

➤ 목 차

연구요약	v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체계	8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유형과 사례	 11
1. 차별의 의미 및 유형	13
2. 직접차별	14
1) 정의	14
2) 국내외 관련 사례	15
3. 간접차별	18
1) 정의	18
2) 국내외 관련 사례	18
4.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23
1) 정의	23
2) 국내외 관련 사례	24
5. 광고에 의한 차별	29
1) 정의	29
2) 국내외 관련 사례	29
6. 장애인의 대리인·동행인에 대한 차별	30
1) 정의	30



2) 국내외 사례	30
7. 보조건·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31
1) 정의	31
2) 국내외 관련 사례	31
Ⅲ.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한 델파이 조사	33
1. 조사대상	35
2. 조사범위	36
3. 자료수집	40
4. 자료분석	41
1) 1차 델파이 분석	42
2) 2차 델파이 분석	47
3)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결과	48
Ⅳ.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결과	51
1. 영역 1: 입학·전학·전입·편입	53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53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54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55
4)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56
2. 영역 2: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58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58
2)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8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9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60
5)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	62
3. 영역 3: 정당한 편의(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63
1)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63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64

3)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65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 기준)	66
5)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66
6)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67
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 연한)	69
4. 영역 4: 평가·진단·시험	70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70
2)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71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72
4)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73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73
5. 영역 5: 기타	74
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74
V. 결론 및 정책제언	77
참고문헌	83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87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124



▶ 표목차

〈표 II-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13
〈표 III-1〉 델파이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36
〈표 III-2〉 교육 관련 법령 목록	36
〈표 III-3〉 교육 관련 행정규칙 목록	40
〈표 III-4〉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p=.05$)	42
〈표 III-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법령별 CVR 계수	43
〈표 III-6〉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법령별 CVR 계수	47
〈표 III-7〉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결과	48

▶ 그림목차

[그림 I -1] 연구수행체계	9
[그림 III-1] CVR 공식	41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장애인차별금지법, 2018).
- 특히 장애인들은 교육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이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에 의한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교육의 정도는 고용참여나 사회통합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고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함(김영일, 2010; 김재원, 박중현, 2018; Parker & Patterson, 2013; Rubin & Roessler, 2000).
-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인해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부족한 행정적 지원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김재원, 박중현, 2018).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분야 채용’ 국민신문고 8,668건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4,279건, 4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국민권익위원회, 2017). 그리고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을 장애학생과 짝을 짓거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가한 학생들을 적절히 처벌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7; 대법원, 2018; 연합뉴스, 20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 이처럼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첫째, 제2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별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음.
 - 그리고 각 차별 유형과 관련된 차별 사례를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차별 사례는 국내 문헌 및 외국 문헌을 통해 수집·분석하였음.
- 둘째, 제3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특히 1차 및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도출한 후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개선 사항,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셋째, 제4장에서는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법령의 개정·삭제·신설안을 5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 넷째, 제2장의 문헌조사, 제3장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제4장의 개정·삭제·신설안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개선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학생 교육 차별 등과 관련된 법률·현장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총 2회에 걸쳐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둘째, 문헌조사를 토대로 차별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였고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제시하였음. 특히 차별 사례는 국내 문헌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 미국 교육부, 영국 교육부 등 해외 문헌에서 수집한 사례도 포함하였음.
-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선정하고 법령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차례 실시하였음. 델파이 조사에는 법률 전문가, 장애인 교육 차별 관련 현장 전문가, 교육 차별을 당한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법률적인 의견과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델파이 조사를 통해 CVR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되었음.
-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안은 상충조항, 상충사유, 개선사항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제시하였음.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유형과 사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서는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의 대리인·동행인에 대한 차별, 보조견·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2018).

〈요약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차별분류	세부조항
직접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대리인·동행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재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보조견·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Ⅲ.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한 델파이 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본 조사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1차적으로 실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상충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상충 법령의 개정·삭제·신설안을 작성하여 델파이 조사지를 구성하였음. 각 문항의 질문과 응답은 내용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조사의 범위는 조사법령 90개, 행정규칙 22개로 자문회의 및 연구진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분석 법령 및 행정규칙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6개 영역(입학, 학교생활, 교육 관련 정당한 편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및 시험, 기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은 법률전문가 4명, 교육 현장전문가 4명, 장애당사자 2명으로 구성하였음. 델파이 패널은 자문회의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섭외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써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였음.
- 모든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정·삭제·신설안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CVR을 구하였음.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10명에 대한 CVR 최소값은 0.62이므로, 0.62 이하의 문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음.



2. 자료분석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법령별 CVR 계수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입학· 전학· 전입· 편입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0.40	삭제	대학 수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장애유무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좌우됨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0.40	수정	대학입학과 관련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0.80	타당	용어 수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0.80	타당	용어 수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0.60	수정	‘장애학생’은 법률상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다른 대상 역시 학생으로 제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으로 수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0.20	삭제	본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교내 수업활동, 교외 수업활동, 학교생활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현장)	0.40	수정	단위 학교에 ‘장애학생의 교육 개선에 대한 계획’이란 명칭 보다는 ‘통합교육 계획’이라는 용어로 수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0.0	삭제	장애학생에 대한 추가 조항 불필요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0.80	타당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수정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0.20	삭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어 본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0	타당	용어 수정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 계획의 내용 등)	0.20	삭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어 불필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타당	추가적인 수정 의견 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0.60	삭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이라는 용어에 이미 차별예방,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조항 불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0.60	수정	모의재판 과목은 재판실무를 배우는 과목으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에 적합한 과목이 아니기에 장애 이해, 인식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도록 추가 조항 신설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	0.80	타당	‘신체적 특성’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특성’으로 수정
정당한 편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0.40	삭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내용에 포함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영)	0.60	수정	원격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해야하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기 보다는,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을 수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 제의 구축)	0.80	타당	3항 추가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0.40	삭제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0	삭제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0.40	삭제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0.80	타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언급된 정당한 편의들은 체육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염두에 둔 것들이므로, '제14조 및 제25조'로 수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육시설)	0.80	타당	개정안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기준)에 추가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0.80	타당	용어 수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0.80	타당	각호 10을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 수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0.80	타당	제1항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의 경우...'로 수정
평가· 진단· 시험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0.80	타당	실제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합하여 동일한 내용을 제시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0.80	타당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0.80	타당	개정내용이 타당함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0.80	타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으로 수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0.40	삭제	개정안이 조항의 취지와 부적합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교육공무원법」 제16조(신체검사)	0.20	삭제	법률에서 제시된 내용이 단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0.80	타당	학생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시험이므로 '장애학생'을 '파견공무원 등'으로 수정
기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0.80	타당	조문의 취지상 '불구'를 '중증의 장애'로 수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0.40	수정	'장애평등'을 '장애차별금지'로 '추진 계획'을 '실적'으로 수정. 제1항 삭제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3〉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법령별 CVR 계수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입학 · 전학 · 전입 · 편입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0.80	타당	비문 수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0.80	타당	비문 수정
교내 수업활동, 교외 수업활동, 학교생활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현장)	0.40	삭제	통합교육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임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0.80	타당	제2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
정당한 편의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0.80	타당	문장을 일부 수정해 의미 전달을 보다 명료하게 함.
기타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0.40	삭제	단순히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



3)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결과

〈요약 4〉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결과

영역	법령명	최종의견
입학 · 전학 · 전입 · 편입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비문 수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 · 편입학 등)	용어 수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용어 수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비문 수정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획균등)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수정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용어 수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추가적인 수정 의견 없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제2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	‘신체적 특성’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특성’으로 수정
정당한 편의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문장을 일부 수정해 의미 전달을 보다 명료하게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의 구축)	3항 추가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언급된 정당한 편의들은 체육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염두에 둔 것들이므로, “제14조 및 제25조”로 수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개정함

영역	법령명	최종의견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용어 수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각호 10을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 수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제1항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의 경우...’로 수정
평가·진단·시험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실제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합하여 동일한 내용 제시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평가와 관련된 편의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개정내용이 타당함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으로 수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학생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시험이므로 ‘장애학생’을 ‘파견공무원 등’으로 수정
기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조문의 취지상 ‘불구’를 ‘중증의 장애’로 수정



Ⅳ.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결과

〈요약 5〉 교육 관련 법령 분석결과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입학, 전학, 전입, 편입	「고등 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진 응시생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p>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p> <p>...중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p> <p>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p> <p>...중략...</p> <p>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p>	<p>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p> <p>...중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p> <p>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p> <p>...중략...</p> <p>4. 각종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p>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p> <p>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p> <p>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p> <p>1. 지체부자유자</p> <p>...중략...</p>	<p>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p> <p>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와 그에 준하는 자</p> <p>...중략...</p>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중략...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중략...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정신적·심리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제17조의7(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중략...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중략...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9.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중략...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9.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를 통하여 학생에게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를 통하여 학생에게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p>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유치원 교육 과정	<p>Ⅲ. 편성과 운영</p> <p>1. 편성</p> <p>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p> <p>...중략...</p> <p>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p>	<p>Ⅲ. 편성과 운영</p> <p>1. 편성</p> <p>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p> <p>...중략...</p> <p>마. 성별, 종교,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p>
정당한 편의	「고등교육법」	<p>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p> <p>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p>	<p>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p> <p>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p> <p>④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원격 직업교육훈련체제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2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에서 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수, 그에 필요한 시설, 교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중략...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중략...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중략...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10.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 ...중략...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중략...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p>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중략...</p>
평가 · 진단 · 시험	「고등 교육법」	<p>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p> <p>...중략...</p>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p> <p>...중략...</p> <p>⑧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1.28.></p>	<p>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p> <p>...중략...</p>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p> <p>...중략...</p> <p>⑧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u>모의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제4항에 따른 편의제공 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u></p>
	「초·중등 교육법」	<p>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p>	<p>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p>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가를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장애인 응시생을 위한 시험편의 및 관련 시험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 중경증 정도, 검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진로심리검사를 선택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①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중략...	제21조(시험의 방법) ①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중략... ⑤ 제1항의 실시시험과 필기시험을



영역	조항	상충조항	대안(개정)
			장애가 있는 파견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영역 5: 기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중증의 장애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대안(개정·삭제·신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장애인의 교육권을 기준으로 교육 관련 법령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념·조항들과 상충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을 대상으로 5영역으로 대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아직도 다수의 법령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가 잔존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교육 프로그램·서비스 등이 통합교육의 이념을 내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의 지적·행동발달을 측정하는 중요한 시험·평가도구가 장애 차별적이기도 함. 이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비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게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령과 연계되어 있는 조례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학교의 입학정원 및 입학절차,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의 선발방법, 모의시험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차별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등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동시에 관련 조례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법률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보다 하위 지침을 마련(또는 개정)하여 수시로 급변하는 상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세부영역(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절차·참정권 등) 별로 구분하여 부당한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발생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②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교육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이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에 의한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정도는 고용참여나 사회통합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고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영일, 2010; 김재원, 박종현, 2018; Parker & Patterson, 2013; Rubin & Roessler, 2000).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인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부족한 행정적 지원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김재원, 박종현, 2018).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분야 채용' 국민신문고 8,668건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4,279건, 4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그리고 아직도 일



선 학교에서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을 장애학생과 짝을 짓거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가한 학생들을 적절히 처벌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대법원, 2018; 연합뉴스, 20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종종 장애인의 교육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에이블뉴스, 2016).

이처럼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이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5대 의무 중 하나이다(Wikipedia, 2018).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말함과 동시에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나 자아실현을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회활동 중에 하나이다(김영일, 2010; Rubin & Roessler, 2000).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 역시 교육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교육)에서는 장애인이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별적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2018). 이러한 법적 기준에 의해 201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 예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종류와 구체적인 예방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며(최승철 외, 2013),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미이행이라는 차별의 의미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차별 발생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최승철 외, 2013).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육 차별에 대한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의 부당한 대우, 성희롱 피해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학교 행정 처분,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민권익위원회, 2017; 연합뉴스, 2016; 에이블뉴스, 20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특히 특수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일반 학교현장, 장애아동을 위한 유·초등 교육현장, 성인 장애인을 위한 대학 및 평생교육현장 등 여러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부족,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 차별적인 교육 행정 등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립특수교육원, 2013; 국민권익위원회, 2017; 연합뉴스, 2016; 최승철 외, 2013).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나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조사하여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과 같은 법령은 장애인의 교육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법령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관련 과거 연구

과거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조사한 유사 연구가 일부 수행되기도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연구가 실시되었는데, 국내법을 18개 분야로 나눠 각 법의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연구하였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의 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건강가정기본법」과 그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6개 법에서 14개의 조항이 상충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총 4가



지 내용이 상충됨을 지적하였다(우주형 외,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장애인복지법」 연구에서는 두 법령 간의 목적과 기능을 구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법 체계 상 서비스급 규범으로 분류하여 법령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법적인 적용관계를 구별하여 법 체계 상의 위상을 명백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령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시행령), 사회적인식개선 등의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조홍식 외, 2009).

민흥기, 김철환(2009)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방송통신·전자정보 관련법을 조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조사하였다. 상충하는 법률의 개정을 위해 법령명, 해당조항, 차별기준(차별행위 유형), 상충사유(충돌사유), 대안(개정·삭제·신설) 등으로 세부 결론을 제시하였다.

2011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법규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 범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간주차별, 연계차별 등으로 소개하였으며, 상충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법규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령 용어를 수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인사규정을 검토하고 장애 차별적인 것으로 판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이용복 외, 2011).

백은령 외(2011)의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상 17개 정부부처의 소관법령 중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성장애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 107개를 선별하여 5가지 분석기준(모성, 고용 및 소득보장, 건강, 폭력피해보호, 법제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주제별로 법령 간 상충되는 핵심내용과 상충사유를 검토한 후 조항 개정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세부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관련 장애인 차별의 종류 및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법령 개선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개선을 위한 법률적·정책적·제도적 방향을 연구하였으며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분석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타당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별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차별 유형과 관련된 차별 사례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차별 사례는 국내 문헌 및 외국 문헌을 통해 수집·분석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1차 및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CVR을 도출한 후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개선 사항,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법령의 개정·삭제·신설안을 5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제2장의 문헌조사, 제3장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제4장의 개정·삭제·신설안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개선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자문회의, 국내 및 해외 문헌조사, 1차 및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병행하였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교육 차별 등과 관련된 법률·현장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총 2회에 걸쳐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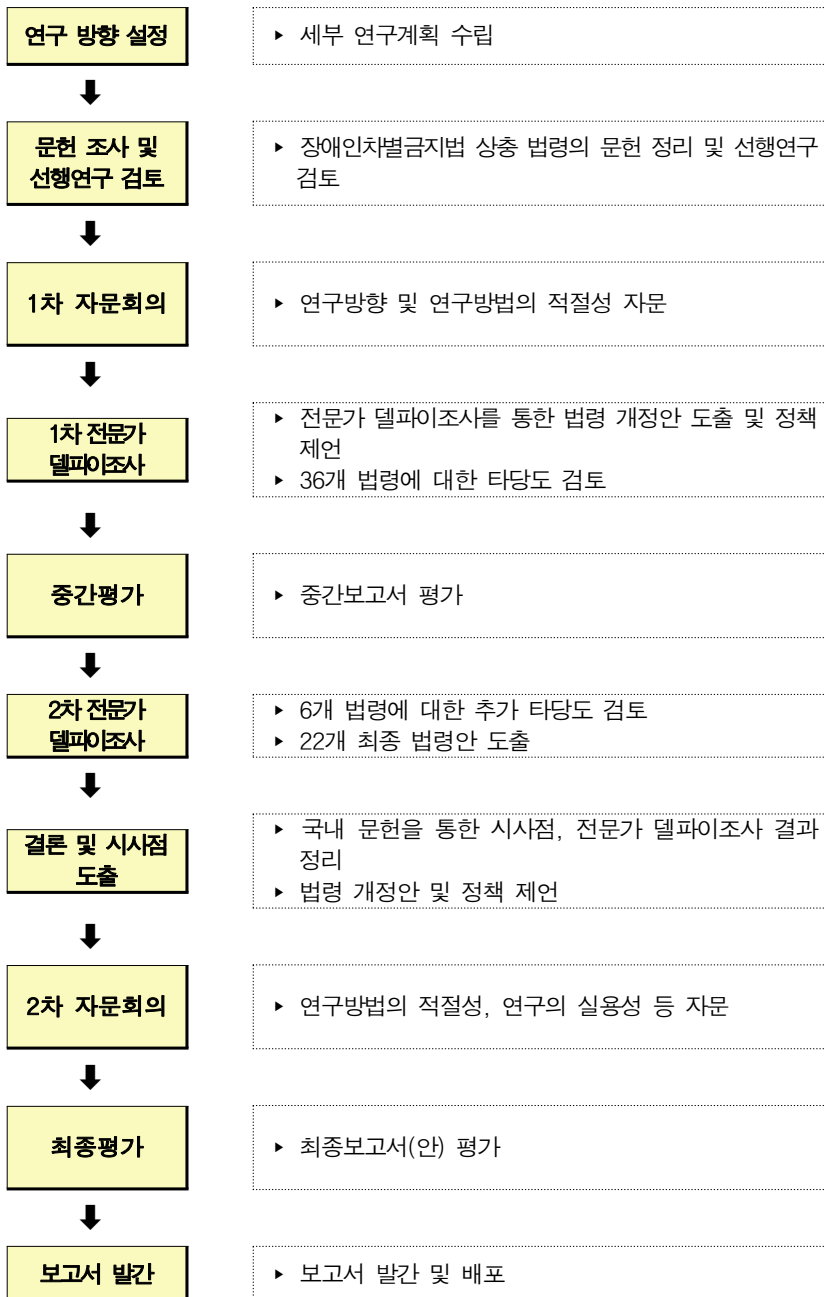
둘째, 문헌조사를 토대로 차별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였고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차별 사례는 국내 문헌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 미국 교육부, 영국 교육부 등 해외 문헌에서 수집한 사례도 포함하였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선정하고 법령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차례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는 법률 전문가, 장애인 교육 차별 관련 현장 전문가, 교육 차별을 당한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법률적인 의견과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CVR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되었다.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안은 상충조항, 상충사유, 개선사항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미시적으로는 세부적인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도식화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I-1]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유형과 사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크게 제13조(차별금지)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차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선행연구한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최승철 외, 2013)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췌하였다.

1. 차별의 의미 및 유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서는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의 대리인·동행인에 대한 차별, 보조견·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조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장애인차별금지법, 2018).

〈표 II-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차별분류	세부조항
직접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차별분류	세부조항
장애인의 대리인·동행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임
보조견·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2. 직접차별

1) 정의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교육 기관이 어떤 개인이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애인의 교육 서비스 이용·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교육 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들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직접차별’이라 한다.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장애가 없었다면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수 있는 대우를 말한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배제·분리·거부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며 비장애인이 받는 교육 서비스의 수준만큼 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최승철 외, 2013).

불리한 대우란 장애인이 어떤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장애인의 유형·무형의 이해관계 및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최승철 외, 2013).

2) 국내외 관련 사례

장애학생과 관련된 직접차별 사례는 학생의 입학·전입, 학교생활,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검사, 교내 프로그램·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접차별은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비장애학생과 비교해 직접적인 차별이나 피해와 관련이 높다.

(1) 입학·전입 등

진정인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자폐와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주거지에서 가까운 피진정인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령에 규정된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수학급의 설치에 「특수교육진흥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에 의거한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급을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실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었다. 또한, 피진정인 학교는 일반교실 이외에도 별도의 학습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였다. 즉 피진정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므로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였다(2008. 5. 2.자 08진정116,117 병합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0).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있었다는 이유로 A예술 중학교로부터 응시원서 접수 및 입학을 거부당했다. 이 문제를 해당 지역교육청에 수차례 제기하자 교육청은 피해자가 현재 다니는 B중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여름방학 전까지 임시적으로 이 학생을 A중학교에 다니도록 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 A중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치했다(최승철 외, 2013).

(2) 학교생활(희롱, 따돌림 등)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for Civil Rights, OCR)는 야키마 학구(Yakima School District)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희롱 혹은 따



돌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학생의 장애 유무, 성별, 인종, 국적 등에 따라 학생들을 희롱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대해 학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야키마 학구(Yakima School District)는 워싱턴 주에서 18번째로 규모가 큰 학구로써 23개의 학교와 약 16,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내에서 히스패닉 및 남미 계통의 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학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집단 희롱과 따돌림 사건이 발생했으며 학구가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권리를 침해했음을 밝혔다. 학구는 차별적인 문구나 언어를 사용해 공지를 하였으며 학생과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며 동등한 수준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학구는 교육부가 학교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서를 보관하였으며 특정 학생에게 비호의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학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방 시민권리 법률에서는 보호받고 있는 개별 특성에 기초한 어떠한 희롱이나 따돌림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학구에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수용하여 학구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희롱이나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며 시민권리 법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학구는 우선적으로 장애 및 성별에 대해 발생한 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희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책을 강구하며 학구 공지문에 장애와 성별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문장과 문구를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Title IX, Title VI, Section 504 & Title II: Sex, Race, and Disability Harassment: Yakima School District (WA) (10-11-5001)(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3) 교육평가 · 진단 · 검사 등

2011년 10월에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뉴저지 웨스트 윈저-플레인브로 지역 학구(West Windsor-Plainsboro Regional School District, New Jersey)에 대한 민원에 합의했다. 민원에 의하면 학구는 장애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자비로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습 평가 실시와 관련해서도 장애 학생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OCR과의 합의를 통해 학구는 학생 추천 양식에 부모나 후견인의 의료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학구 규정에 의해 자비로 신체 검사를 실시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액 검사 비용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학구는 부모와 교사의 추천 절차를 개선하고 신규 절차에 대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West Windsor-Plainsboro Regional School District (NJ); OCR Complaint No. 02-11-1098)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4) 교육 프로그램 · 서비스 등

이베션 타운십 학구(Evesham Township School District)는 재활법 Section 504와 미국장애인법 Title II를 위반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자신의 장애가 있는 딸의 교육과 방과 후 주간케어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 학구는 1:1 보조인 및 행동치료사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OCR에 의하면 이베션 아동 케어 프로그램(Evesham Child Care Program)은 학구 내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장애학생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개별적인 보조인력이나 행동치료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부모는 비장애 학생의 부모가 지불하는 학교 수업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무 역시 없다고 결정했으며 특히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1:1 보조인력 지원은 아동 케어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학구는 학생에게 1:1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CR은 1:1 보조인력 지원이 학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한 학구 측 자료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학구는 부모나 후견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하였으며 1:1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에 대한 입학 거부를 규정한 학구 절차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Evesham Township School District (Marlton, NJ); OCR Complaint No. 02-11-1072)(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장애학생이 본인의 장애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학교 기숙사의 1인실을 요청한 것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한 뉴욕 주립 대학교-포츠담(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Potsdam)을 대상으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OCR 조사에 의하면 대학교는 장애학생에게 장애를 이유로 1인 기숙사 실을 배정하였으나 비장애학생



이 개인적인 사유로 혼자 거주할 때 지불하는 추가 비용을 부과했다. 또한 대학교는 일상적으로 의료적인 사유로 1인실에 거주해야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발견했다. 합의 결과, 대학교는 장애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의료적 및 장애를 이유로 1인실에 거주해야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Potsdam; OCR Complaint No. 02-11-2062)(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3. 간접차별

1) 정의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차별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장애인에게 미치는 해당 기준의 부정적 효과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기준이 충분히 회피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사전에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고 문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간접차별적인 행위이다(최승철 외, 2013).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육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어떤 장애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절차상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것이라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최승철 외, 2013).

2) 국내외 관련 사례

장애로 인한 간접차별은 입학·전입, 학교생활, 교육평가·진단·검사, 교육 프로그램·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학생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다수 조사되었다.

(1) 입학·전입 등

A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평가는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나뉘는데, 언어장애가 있는 진정인의 경우 총 100점 만점 중 서류전형의 경우 6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비교적 우수했으나 구술시험은 40점 만점에 15.33점을 받아 상당히 저조했다. 구술시험은 언어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만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험절차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인은 대학원 입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2008. 12. 22.자 결정08 진정6230648 병합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0).

(2) 학교생활(희롱, 따돌림 등)

OO학교 OO교사가 수업 중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A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학생은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장인 피진정인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해학생의 치료, 후유증의 조기발견,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사건에 대해 조속히 통보하지 않고 약 한 달 가량 통보를 지연시켰고, 사건발생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후에 제1차 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논의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특수학교의 장으로서 자기옹호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지연시켜 피해학생의 후유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016. 2. 17.자 결정 15진정0860000)(국가인권위원회, 2017).



(3) 교육평가 · 진단 · 검사 등

맴피스 시립 학구(Memphis City School District)는 학구에 재학 중인 학생의 개별 건강케어계획(Individual Health Care Plans, IHCP)을 작성하는데 있어 학생의 음식 알레르기, 당뇨병, 천식, 기타 건강 관련 질환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에서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결과 학구는 모든 부모와 후견인들에게 학생의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이나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지를 평가하는 학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공지하기로 했다. 만약 학생이 현재 IHCP를 체결한 경우 학구는 부모나 후견인에게 학생의 평가 및 배치와 관련된 권리와 안전 조치에 대해서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학구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음식 알레르기, 당뇨병, 천식,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평가, 배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Section 504: Access to FAPE Title VI: Different Treatment Memphis City School District(TN) (04-10-5002)(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4) 교육 프로그램 · 서비스 등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for Civil Rights, OCR)는 양커 공립학교(Yonkers Public Schools)에게 학구(School District) 재학 중인 총 학생 26,488명 중 4,298명(16.2%)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통합교육을 위해 부당한 접근을 개선하고 적합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에 의하면,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에 배치되어 관련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장애학생 중 3,503명(81.5%)은 일반적인 수업환경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양커 학구(School district)는 장애학생들에게 최적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학생들을 위한 일상적인 교육환경(regular educational environment)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과 비교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방법에서 제한적 교육환경에 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일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Yonkers Public School District (NY) (02-15-5001)(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캘리포니아주의 샌 버나디노 카운티 교육감(San Bernardino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에게 장애학생을 위한 대체 및 청소년 법정 학교에 대해 합의했다. 교육부의 시민권리과(Office for Civil Rights, OCR)에 의하면 샌 버나디노 학구(School district)는 장애학생들과 관련해 재활법 Section 504와 미국장애인법 Title II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대체학교나 청소년 법정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고품질의 공공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함을 지적했다. 장애학생들을 동일한 교육과정만을 선회하는 운전식 배치를 중단하고 학업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배치를 해야하며 학교-교도소(school-to-prison)의 선형적인 배치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조사를 통해 샌 버나디노 학구 담당자는 대체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운티로써 카운티는 14개의 지역학교와 2개의 청소년 법정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매년 교육부에서는 지역학교나 청소년 법정 학교 등의 대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및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 및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에 맞는 적합한 교육 계획을 설계하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San Bernardino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 (09-14-5002)(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알라바마 교육부(Alabama Department of Education)는 특수교육 버스 노선에 의해 통학하는 장애학생들의 장애로 인한 차별 사건과 관련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와 합의했다. 알라바마 교육부의 시민 교통부(Department of Pupil Transportation)는 알라바마 전역에 걸친 종합적인 학생 수송 프로그램과 더불어 스쿨버스 검사, 차량 재검,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스쿨버스 운전 면허 및 자격증, 기술 지원, 주정부 버스 운영 모니터링 및 감독, 특수 운송수단 운영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학생을 위한 수송은 비장애학생과 비교해 학교 시수가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알라바마 교육부는 특수교육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장애학생들의 학교 시수가 단축되지 않도록 알라바마 전역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장애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에서 단축 시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단축 시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알라바마 교육부는 관련 내용과 기준을 주의 132개 모든 학



교에 전달했으며 감사받지 않은 학교의 버스 시간표를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Section 504: Shortened School Day; Alabama Department of Education, AL (#04-10-5001)(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2012년 9월에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에서는 뉴저지의 이스트 오렌지 학구(East Orange School District, New Jersey)와 연관된 민원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OCR의 조사에 의하면 이스트 오렌지 학구(East Orange School District)에 재학 중인 다수의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self-contained classrooms)에 배치되어 있었다. OCR은 학구가 장애학생들이 보충적 서비스와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일반 학업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고 있는 여부를 증명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학구는 재활법 Section 504와 미국장애인법 Title II를 준수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 배치와 관련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며 새로 임명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절차와 방법을 교육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특수학급(self-contained) 환경에 배치된 모든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옹호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했다(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East Orange School District (NJ), OCR Case No. 02-11-5002)(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우스터 시립 학구(Wooster City School District)와 오하이오 고등학교 체육 협회(Ohio High School Athletic Association) 및 기타 4개 학구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이 학교 간 체육대회에 참여하는데 차별받은 진정을 조사했다. OCR은 학교 간 체육대회 기간 동안 비장애학생들은 도보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반해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은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본인이 소속된 팀을 위해 점수를 획득할 기회를 박탈 당한 것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학구와 학교 관계자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학교 간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경기 참여에 있어 추가적으로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나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Section 504/Title II: Equal Access to Interscholastic Sports: Wooster City School District (OH): (15-11-1080): Ashland City School District (OH) (15-13-5901); Lexington Local School District (OH) (15-13-5902);

Madison Local School District (OH) (15-13-5903) & Mansfield City School District (OH) (15-13-5904); Ohio High School Athletic Association (15-12-4010)(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코스모스 파운데이션 하모니 공립 학교(Cosmos Foundation's Harmony Public Schools)에 소속된 특허학교에서 영어 학습자와 장애학생들에게 타 학생들과 비교해 동등한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적인 입학절차, 상담 서비스, 기타 학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조사했다. 합의 결과 학구는 영어 학습자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의사소통계획(Individual Communication Plan)을 작성하고 평가 및 배치 절차를 개선하고 차별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년 신입생 비율을 확인해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Title VI/Section 504/Title II: Charter Schools—Equal Access and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Harmony Public Schools (TX) (06-11-5004) On November 26, 2014)(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4.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 정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즉,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시설·설비·도구·서비스를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정책·절차·관행 등을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의 인적·물적·비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최승철 외, 2013). 예를 들어, 교육 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를 통해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지 장애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최승철 외, 2013).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비용이 좀 든다거나 귀찮다거나 불편하다는 정도의 부담이나 곤란이 아니라 지나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례적이지 못한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과도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많은 비용을 요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 및 서비스(교육 서비스)나 다른 참여자들(타 학생)의 관련 활동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한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모든 관련 요소들, 예를 들면 편의 비용의 크기, 편의 제공자의 재정 및 조직 규모, 편의 제공자의 사업 성격에 대한 영향, 다른 참여자에 대한 영향, 편의 제공자의 편의 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최승철 외, 2013; ADA, 2009).

2) 국내외 관련 사례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사례는 크게 정보 접근성 및 시설·건축물 접근성의 미비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주요한 사건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수단과 관련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1) 정보 접근성

진정인은 시각장애인 교사로서 2008. 1. 14 ~ 2. 17. 사이에 000원격교육 연수원에서 “독서지도교사(나도 이제 전문가)라는 원격교육연수”를 수강하였으나, 강의 내용 중 일부가 교육교재로 대체됨에도 교육교재가 점자나 파일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강의내용을 마우스로 클릭해야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000원격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진정을 하였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독서지도교사(나도 이제 전문가)”는 총 5주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부분과 동영상 강의로 제작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제작된 플레시 애니메이션 부분은 주요내용만을 음성으로 요약 설명하거나 아예 음성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스크린 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 텍스트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스크린 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형태의 보조교재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교육·훈련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2008. 1. 21.자 08진정104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0).

A사이버대학교 사이트의 주메뉴 영역의 ‘입학안내’ 메뉴에서 ‘2015-2학기 시간제 모집’이 기간과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들어 확인하려고 하면 이미지는 읽을 수 없어 대체텍스트에서는 입학 페이지로 이동한다는 내용만 음성으로 나왔다. 모든 하위 페이지에 페이지 제목을 상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메인페이지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메뉴의 체계를 알 수 없었다. 또한 모든 페이지의 본문 바로가기 링크가 화면에 보이지 않아 뇌병변장애인이거나 상지장애인은 필요한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해당 학교에 지원하려고한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사이버 대학교가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였다(에이블뉴스, 2015).

2009년 6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시각장애학생에게 접근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버지니아 대학교 다든 경영 학부(University of Virginia’s Darden School of Business)와 합의했다. 경영 학부에서는 수업과 관련해 킨들 DX(Kindle DX) 전자 도서 리더기와 웹 브라우저를 구입해 수업 교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파일럿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없었으며 동등한 교육 참여 보장의 침해로 OCR에서 조사했다. 이에 대학교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선 혹은 대체 방법을 활용해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Section 504/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University of Virginia Darden School of Business (VA); OCR Complaint No. 11-09-2094)(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장애학생들의 정보 접근과 관련해 미국 내 7개주 및 미국령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지시했다. 교육 기관의 웹 사이트의 접근성 미비로 교육부의 조사를 받은 기관은 주노 알래스카 학구(Juneau Alaska School District), 괌 교육부(Guam Department of Education), 몬타나 시청각장애인 학교(Montana School for the Deaf and Blind), 산타페 뉴멕시코 공립학교(Santa Fe New Mexico Public Schools), 워셔 카운티 네바다 학구(Washoe County Nevada School District), 데이빗슨 네바다 아카데미(Davidson Academy of Nevada), 네바다 교육부(Nevada Department of Education), 오레건 교육부(Oregon Department of Education), 그레인트 유타 학구(Granite Utah School District), 벨링햄 워싱턴 학구(Bellingham Washington School District), 워싱턴 공교육 교육감(Washington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이다. 교육부는 학교, 학구, 주교육부 등에서 학교 웹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경우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 온라인 정보, 관련 서비스 등에 접근하는데 있어 부주의하게 배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미접근 웹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은 재활법 Section 504와 미국장애인법 Title II를 위반한 조치이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모든 11개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알트 태그라고 불리는 텍스트 설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저시력 혹은 전맹 학생들이 화면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미지화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주로 발견된 문제로는 마우스만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해 저시력, 전맹, 미세 손동작에 장애가 있는 장애학생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으며 영상 자료에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영상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11개 교육 기관에서는 자발적으로 장애학생들이 접근 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제작할 것에 합의했다(Juneau School District (AK) 10-16-1109; Guam Department of Education (GU) 10-16-1098; Montana School for the Deaf and Blind (MT) 10-16-1160; Santa Fe Public Schools (NM) 08-16-1189; The Davidson Academy of Nevada (NV) 10-16-1133; Nevada Department of Education (NV) 10-16-1101; Washoe County School District (NV) 10-16-1134; Oregon Department of Education (OR) 10-16-1102; Granite School District (UT) 08-16-1232; Bellingham School District (WA) 10-16-1108; Washington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WA) 10-16-1103)(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영스타운 주립 대학교(Youngstown State University)와 장애대학생을 위해 접근 가능한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연방 시민권리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보 제공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재학 중인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학교에 응시할 응시생, 학교 직원, 학교 방문객 등을 위해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두가 사용하기 쉬운 웹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영스타운 주립 대학교의 웹 사이트의 접근성이 부족하여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웹 접근성이 상당히 침해되었으며 학교에서 발간하는 문서가 비차별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대학교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웹 사이트를 개선해 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재활법 Section 504와 미국장애인법 Title II에서 언급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인터넷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해 교직원, 교수,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것에 합의했다 (Youngstown State University (OH) (15-13-6002)(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2) 시설 · 건축물 접근성

원고는 1975년 추락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04년 말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2005. 3.경부터 위 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원고는 ○○대학교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의 건물 중 ○○대학원이 있는 평생교육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구실이 있는 인문관, 중앙도서관, 식당, 학생회관 등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원고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각 건물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의 미설치, 출입로의 불편,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 등과 같이 그 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심한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학교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손해배상(기)】)(대법원, 2018).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몬타나 대학의 몬타나 공과대학(Montana Tech of the University of Montana)을 대상으로 재활법 section 504와 미국장애인법 Title II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를 조사했다. 대학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캠퍼스의 접근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논의 결과 대학은 OCR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학은 학교 식당과 일부 건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학교 농구 및 축구 경기장에 접근 가능한 좌석을 배치하며 강당에 청각 알람 장치를 설치하며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나 건물에는 장애인 접근성 표지판을 부착하기로 했다(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Montana Tech of the University of Montana (MT) (10086001)(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리과(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몬타나 웨스턴 대학교(University of Montana Western)가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OCR은 학교 기숙사, 식당, 교실, 체육관, 행정 건물, 캠퍼스 밖 컨퍼런스 건물과 체육관 등 학교의 여러 건물과 시설을 현장 조사했다. OCR과 대학 관계자는 접근성 개선에 합의하여 대학은 대학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장애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접근성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나 시설에서 제공되는 학교 프로그램 혹은 활동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이나 방법에 따라 학교 측에서 적절하게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접근성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대체 방법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Section 504/Title II: Accessibility: University of Montana Western (MT) (10096002)(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3) 이동수단

시카고 공립 학교(Chicago Public Schools)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와 조정·합의했다. 조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IEP) 혹은 재활법 Section 504 계획 등에서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경우 시카고 공립학교는 장애학생들에게 교통운송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시카고 공립학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공표했다. 그리고 장애학생 중 필요한 교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정 내용은 장애학생의 부모들에게 온라인으로 통보되었으며 IEP 및 재활법 Section 504 계획을 다루는 회의 등에서 공유되었다(Section 504/Title II: FAPE: Chicago Public Schools District #299 (IL) - (05105001)(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5. 광고에 의한 차별

1) 정의

전자(TV, 라디오, 인터넷 등) 및 비전자(홍보물, 팸플릿 등)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 혹은 광고하는 경우 해당 매체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광고에 의한 차별로 규정한다(최승철 외, 2013).

2) 국내외 관련 사례

광고에 의한 차별과 관련해서 장애 혹은 장애학생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장애를 간접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사례는 일부 존재한다.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Brian은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특수교육학과에서 제작한 학교 행사 팸플릿에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이미



지 사진을 제거해 달라고 학과에 요청했다. Brian은 장애인을 상징하는 픽토그램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모습은 장애인을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이며 피동적인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최근 제작된 능동적인 장애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픽토그램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Accessibleicon, 2018).

6. 장애인의 대리인 · 동행인에 대한 차별

1) 정의

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활동보조인처럼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개인을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이들에게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여 이들의 대리 또는 보조 등의 활동을 훼손하거나, 또는 이들의 활동을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로 간주된다(최승철 외, 2013).

일반적으로 장애인들 중 다수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동행 하거나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후견인 혹은 부모와 동행하여 교육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보조인 혹은 후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이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며, 보조인의 도움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국내외 사례

장애학생을 지원,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영국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건을 진정하고 옹호하는 아동 법률 자문단체(Child Law Advice)에 의하면 평등법(Equality Act)은 장애학생의 보조인 혹은 부모 등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장애학생이 교과과정 이외의 특별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여가활동(leisure activities), 방과 후 동아리 활동(after-school clubs), 과제 동아리(homework clubs), 스포츠 활동

(sports activities), 학교 소풍(school trips) 등의 활동에 보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Child Law Advice, 2018).

7. 보조견 ·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1) 정의

장애인이 교육 기관에 방문하기 위해 보조견과 대동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최승철 외, 2013).

2) 국내외 관련 사례

보조견 · 보조기구의 사용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서비스견에 대한 차별 사례가 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Fry의 부모는 적절히 훈련된 Fry의 서비스견(service dog)을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나폴레옹 지역학교(Napoleon Community Schools)를 미국장애인법 Title II와 재활법 section 504을 위반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Fry는 중증 뇌성마비로 인해 이동성, 운동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으며 Fry의 소아과 의사는 Fry의 이동, 일상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된 서비스견을 처방했다. 서비스견은 물건 옮기기, 문열기, 바닥에 있는 물건 들어올리기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지역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에즈라 이비 초등학교(Ezra Eby Elementary School)에서는 2008년-2010년도에 Fry의 서비스견을 학교로 데리고 오는 것을 거부했다.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조정을 통해 학교 관계자는 서비스견의 동행 · 동석을 허용하기로 했다(Fry v. Napoleon Community Schools, 15-497)(U.S. Supreme Court, 2017).

Ⅲ.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한 델파이 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의 정의 및 종류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충되는 법령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상충되는 법령을 확인한 후 법령을 개정·삭제·신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개정·삭제·신설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된 자료가 적고 전문가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한 경우 델파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CVR을 통한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화할 수 있어 상충 법령에 대한 연구자가 제시한 개정·삭제·신설한 내용의 타당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awshe, 1975).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삭제·신설안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법률·장애전문가 및 교육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패널의 수는 최소한 10명으로 구성해야 하며(Murphy & Hammons, 1995) 델파이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10명에서 15명이면 충분하여(Delbecq, Van de Ven, & Gustafson, 1975) 본 연구에서는 총 10명의 전문가를 델파이 패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법률전문가 4명, 교육 현장전문가 4명, 장애당사자 2명으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패널은 자문회의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섭외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써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패널의 성별은 남성이 7명, 여성이 3명이었고 패널 중 장애인은 2명이었다.



〈표 Ⅲ-1〉 델파이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번호	성별	직위	경력	장애유무
1	남	변호사	15년	무
2	남성	변호사	14년	무
3	여성	변호사	11년	무
4	여성	변호사	15년	무
5	남성	교장	30년	무
6	여성	교장	31년	무
7	남성	교사	20년	무
8	남성	교사	14년	유
9	남성	교육연구사	20년	무
10	남성	기간제 교사	10년	유

2. 조사범위

2018년 7월 기준으로 현행 교육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263개(교육부 주관 법령)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자문회의 및 연구진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분석 법령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6영역(입학, 학교생활, 교육 관련 정당한 편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및 시험,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 법령을 선정하였다. 조사 법령은 90개이며, 구체적인 조사 법령 목록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교육 관련 법령 목록

순번	법령명
1	고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시행령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과학교육 진흥법
6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7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순번	법령명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	교육공무원법
11	교육기본법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1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1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사립학교법
22	사립학교법 시행령
23	사이버대학 설치·운영 규정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8	영재교육 진흥법
29	영재교육 시행령
30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31	유아교육법
32	유아교육법 시행령
33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34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35	인성교육진흥법
3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37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3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3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40	자격기본법



순번	법령명
41	자격기본법 시행령
4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4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47	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55	진로교육법
56	진로교육법 시행령
57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58	초·중등교육법
5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61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6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63	평생교육법
64	평생교육법 시행령
65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66	학교보건법
67	학교보건법 시행령
6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6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7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번	법령명
7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	학교체육 진흥법
76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77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학술진흥법
81	학술진흥법 시행령
82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8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9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시행규칙

이와 더불어 교육 관련 행정규칙도 분석하였다. 자문회의 및 연구진회의를 통해 전체 190개 행정규칙 중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6영역(입학, 학교생활, 교육 관련 정당한 편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및 시험,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 법령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행정규칙은 22개이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 행정규칙은 <표 Ⅲ-3>와 같다.



〈표 III-3〉 교육 관련 행정규칙 목록

순번	행정규칙명
1	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과용 도서
2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3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5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6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7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8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9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10	유치원 교육과정
1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2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14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15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6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7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18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19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20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2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3. 자료수집

델파이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1차적으로 실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 및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상충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상충 법령의 개정·삭제·신설안을 작성하여 델파이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질문과 응답은 내용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델파이 1차 조사는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는 수정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델파이 조사 이전에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미 1차 조사 과정을 어느 정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수정 델파이 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델파이 패널들이 수정사항·새로운 견해·조언 등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1차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1차 조사는 2018년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차별 영역·범위에 따른 상충 법령에 대한 1차 조사의 내용타당도 점수만으로는 개정·삭제·신설안의 내용타당도를 확증하기 어려워 추가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이후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추가하여 상충 법령의 개정·삭제·신설안을 재구성하여 2차 조사지를 작성하였으며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이 역시 이메일을 통해 조사하였다. 패널들은 1차와 2차 조사 문항에 대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전부 응답을 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AS 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정·삭제·신설안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CVR을 구하였다. CVR 산출 공식은 [그림 III-1]과 같다(Lawshe, 1975).

$$CVR = \frac{Ne - N/2}{N/2}$$

(N: 응답 사례수, Ne: Likert 4-‘타당함’ 또는 Likert 5-‘매우 타당함’ 응답 빈도수)

[그림 III-1] CVR 공식

Lawshe(1975)에 의하면 CVR은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이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은 <표 III-4>와 같다(Lawshe, 1975).



〈표 III-4〉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p=.05$)

응답자 수	CVR 최소값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10명에 대한 CVR 최소값은 0.62이므로, 0.62 이하의 문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5점 리커트 척도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 타당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타당하다 4점, 매우 타당하다 5점으로 하였다.

1) 1차 델파이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1차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수정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델파이 조사 이전에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미 1차 조사의 과정을 어느 정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수정 델파이 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델파이 패널들이 수정사항, 조언 등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1차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헌분석을 기초로 교육 관련 법령을 6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 36개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상충조항, 상충사유, 개정·삭제·신설안으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 질문지는 2018년 8월에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패널들에게 전송되었으며 이 메일로 응답지를 취합하였다. 취합 후 각 법령별로 타당하다 4, 매우 타당하다 5를

선택한 델파이 패널의 수를 계수하여 CVR 최소값인 0.62를 기준으로 0.62 이상은 타당으로 0.62 이하는 비타당으로 분류하였다. 추가적으로 비타당으로 구분된 법령은 CVR 비율과 델파이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과 삭제로 재분류하였다.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재차 작성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CVR 비율이 0.40 이하처럼 타당도가 현저히 낮고 구조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삭제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36개 법령 중 타당은 18개, 수정은 6개, 삭제는 12개로 분석되었으며 수정으로 분류된 6개 법령은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통합·반영하여 2차 델파이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법령별 CVR 계수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입학· 전학· 전입· 편입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0.40	삭제	대학 수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장애유무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좌우됨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0.40	수정	대학입학과 관련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0.80	타당	용어 수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0.80	타당	용어 수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0.60	수정	‘장애학생’은 법률상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다른 대상 역시 학생으로 제안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으로 수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0.20	삭제	본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교내 수업활동 (수업, 실험, 실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현장)	0.40	수정	단위 학교에 ‘장애학생의 교육 개선에 대한 계획’이란 명칭 보다는 ‘통합교육 계획’이라는 용어로 수정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등), 교외 수업활동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교생활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0.0	삭제	장애학생에 대한 추가 조항 불필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취업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 (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0.80	타당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수정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0.20	삭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어 본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0	타당	용어 수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 본계획의 내용 등)	0.20	삭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어 불필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0	타당	추가적인 수정 의견 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0.60	삭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이라는 용어에 이미 차별예방,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조항 불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0.60	수정	모의재판 과목은 재판실무를 배우는 과목으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에 적합한 과목이 아니기에 장애 이해, 인식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도록 추가 조항 신설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	0.80	타당	‘신체적 특성’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특성’으로 수정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정당한 편의 (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 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0.40	삭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내용에 포함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영)	0.60	수정	원격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해야하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기 보다는,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을 수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0.80	타당	3항 추가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0.40	삭제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0	삭제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0.40	삭제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0.80	타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언급된 정당한 편의들은 체육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염두에 둔 것들이므로, “제14조 및 제25조”로 수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육시설)	0.80	타당	개정안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기준)에 추가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0.80	타당	용어 수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0.80	타당	각호 10을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 수정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0.80	타당	제1항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의 경우...'로 수정
평가 · 진단 · 시험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0.80	타당	실제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합하여 동일한 내용을 제시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0.80	타당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0.80	타당	개정내용이 타당함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0.80	타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으로' 수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0.40	삭제	개정안이 조항의 취지와 부적합
	「교육공무원법」 제16조(신체검사)	0.20	삭제	법률에서 제시된 내용이 단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0.80	타당	학생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시험이므로 '장애학생'을 '파견공무원 등'으로 수정
기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0.80	타당	조문의 취지상 '불구'를 '중증의 장애'로 수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0.40	수정	'장애평등'을 '장애차별금지'로 '추진 계획'을 '실적'으로 수정. 제1항 삭제

2) 2차 델파이 분석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총 6개의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델파이 패널들에게 타당정도를 재차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후 수정 사항과 평균 타당값을 추가하여 상충조항, 상충사유, 개정·삭제·신설안으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2차 질문지는 2018년 9월에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패널들에게 전송되었으며 이메일로 응답지를 취합하였다. 취합 후 각 법령별로 타당하다 4, 매우 타당하다 5를 선택한 델파이 패널의 수를 계수하여 CVR 최소값인 0.62를 기준으로 0.62 이상은 타당으로 0.62 이하는 비타당으로 분류하였다. 추가적으로 비타당으로 구분된 법령은 CVR 비율과 델파이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과 삭제로 재분류하였다.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재차 작성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CVR 비율이 0.40 이하처럼 타당도가 현저히 낮고 구조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삭제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6개 법령 중 타당은 4개, 삭제는 2개로 분석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법령별 CVR 계수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입학·전학·전입·편입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0.80	타당	비문 수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0.80	타당	비문 수정
교내 수업활동(수업, 실험, 실습 등), 교외 수업활동(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교생활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현장)	0.40	삭제	통합교육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임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0.80	타당	제2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



영역	법령명	CVR	분석 결과	분석의견
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정당한 편의 (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0.80	타당	문장을 일부 수정해 의미 전달을 보다 명료하게 함
기타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0.40	삭제	단순히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음

3)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결과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CVR 계수에 기초해 타당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36개 개정안 중 최종 22개 법령이 타당하였으며 14개 법령이 비타당으로 분류되었다.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당초 6영역으로 구분된 영역을 5영역으로 조정하였으며,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결과는 <표 Ⅲ-7>과 같다.

<표 Ⅲ-7>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결과

영역	법령명	최종의견
입학·전학· 전입·편입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비문 수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용어 수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용어 수정

영역	법령명	최종의견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 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비문 수정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획균등)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수정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용어 수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추가적인 수정 의견 없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제2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
정당한 편의 (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	‘신체적 특성’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특성’으로 수정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문장을 일부 수정해 의미 전달을 보다 명료하게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의 구축)	3항 추가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언급된 정당한 편의들은 체육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염두에 둔 것들이므로, ‘제14조 및 제25조’로 수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개정함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용어 수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각호 10을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 수정
평가·진단· 시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제1항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의 경우...’로 수정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실제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합하여 동일한 내용 제시
	「초·중등교육법」	평가와 관련된 편의사항을



영역	법령명	최종의견
	제9조(학생 · 기관 · 학교 평가)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개정내용이 타당함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으로 수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학생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시험이므로 ‘장애학생’을 ‘파견공무원 등’으로 수정함
기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조문의 취지상 ‘불구’를 ‘중증의 장애’로 수정함

Ⅳ.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진들은 교육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을 분석하였으며 총 5영역으로 구분하여 상충조항, 상충사유, 대안(개정·삭제·신설)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2개 법령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영역 1: 입학·전학·전입·편입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1) 상충조항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충사유

장애인의 고등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을 위한 입학전형이 증가하고 있어 대학은 이와 관련된 정보나 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장애학생들이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특히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어 입학전형과 관련된 계획을 명확한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김재원, 박종현, 2018).

(3) 대안(개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



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진 응시생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1) 상충조항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중략...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2) 상충사유

장애(disability)를 의미하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장애(handicap), 손상(impairment), 손실(loss), 질환(disease)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체라는 단어는 주로 지연(delay), 지체(retard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용어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Patterson & Witten, 1987;

Smart, 2015).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나 단어의 사용을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체라는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3) 대안(삭제)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중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중략...

4. **각종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1) 상충조항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지체부자유자

...중략...

(2) 상충사유

지체부자유자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 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사용이 지속적인 장애로 일반 노동현장에서는 생업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정해동, 2000; 최준옥, 1998). 과거에 지체부자유자를 영어권에서는 불구(crippled), 신체장애(physically disability) 등으로 칭했으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대신 지체장애(physical disabil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체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atterson & Witten, 1987; Smart, 2015).

(3) 대안(개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와 그에 준하는 자
...중략...

4)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1) 상충조항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중략...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충사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서도 별도의 선발절차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중략...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영역 2: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1) 상충조항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충사유

「교육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특성·상태·환경과는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을 받을 기회나 환경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의해 사회활동·직업활동·자립생활 등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김영일, 2010; Rubin & Roessler, 2000). 이에 장애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교육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상충조항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

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2) 상충사유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무형·유형의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입학, 평가·시험, 교육 시설물, 전자적 교육 정보, 학교생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제17조의7(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의 증진)를 신설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비차별적인 교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대안(신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제17조의7(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상충조항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중략...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2) 상충사유

장애인의 취업률은 10.8%로 비장애인의 취업률 32.1%에 비해 1/3 수준이며 장애인의 고용기회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노무직, 일용직, 제조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양질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이수용, 서원선,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이에 장애인의 직업개발·직업훈련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중략...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 8.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9.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1) 상충조항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상충사유

장애인은 소송·재판 과정 중 법조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리한 대우 혹은 부당한 판결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몰이해,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판결, 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실제 법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7). 이에 예비 법조인을 양성·교육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소의 계층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대안(신설)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를 통하여 학생에게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

(1) 상충조항

Ⅲ. 편성과 운영

1. 편성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중략...

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2) 상충사유

누리교육과정은 5~7세 아동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교육과정으로써 아동의 기초학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주요한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기초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태도를 형성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유·청년기 및 성인기 인식과 차별예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초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Smart, 2015; Yunker & Block, 1986).

(3) 대안(개정)

Ⅲ. 편성과 운영

1. 편성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중략...

마. 성별, 종교,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3. 영역 3: 정당한 편의(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1)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1) 상충조항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 상충사유

원격대학 수업은 주로 방송·통신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강의가 주로 행해지며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적절한 정보통신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웹사이트, 통신망 등의 접근성 미비로 인해 다수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17; 김재원, 박종현, 2018;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원격대학의 접근성 확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이다.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시행령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④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1) 상충조항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상충사유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들이 원격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나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접근 가능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3) 대안(개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1) 상충조항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상충사유

학교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접근이 결여된 체육시설, 체육 교재·기자재 등으로 장애학생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2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 기준)

(1) 상충조항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상충사유

장애학생이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세미나실 등과 같은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시설에 접근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립특수교육원,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대안(신설)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에서 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1) 상충조항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

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

(2) 상충사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에 의하면 시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처럼 장애교원이 연수 및 훈련을 받는 경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대안(신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수, 그에 필요한 시설, 교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6)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1) 상충조항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중략...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중략...

(2) 상충사유

사이버대학 수업은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강의가 주로 행해지며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적절한 인터넷 및 웹사이트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웹사이트, 통신망 등의 접근성 미비로 인해 다수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사이버대학의 접근성 확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이다.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3) 대안(개정)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중략...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10.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

...중략...

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1) 상충조항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중략...

(2) 상충사유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통신 교육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대안(신설)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4. 영역 4: 평가 · 진단 · 시험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1) 상충조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중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중략...

⑧ 시 ·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1.28.>

(2) 상충사유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당한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에 맞는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은 최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장애학생과 비교해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서원선, 고아라, 2016; ADA, 2009).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서도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2018). 특히 모의시험의 경우에도 장애학생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안(개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중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중략...

⑧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모의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제4항에 따른 편의제공 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1) 상충조항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상충사유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여러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주요한 방법으로써 적절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능력, 잠재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적절한 편의가 동시에 제공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1) 상충조항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 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상충사유

장애인 중 중증장애, 중복장애, 기타 장애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경우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위를 수료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교육시설,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장애인 교육에 대한 가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일부 장애인들은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다(비마이너, 2014; 중앙일보, 2018). 이에 검정고시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장애인응시생을 위한 시험편의와 더불어 일시·장소 등을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고할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

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장애인용시생을 위한 시험편의 및 관련 시행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4)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1) 상충조항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2) 상충사유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맞는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진로심리검사는 장애의 종류, 중경증 정도, 검사의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당한 편의로써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Parker & Patterson, 2013).

(3) 대안(개정)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 중경증 정도, 검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진로심리검사를 선택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1) 상충조항

제21조(시험의 방법) ①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중략...



(2) 상충사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참여해야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장애에 따른 적절한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구체적으로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대체 시험지 제공, 시험보조인력 제공 등의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하며 실기시험의 경우 보조기기 사용, 시험유형의 조정 등과 같은 시험편의가 제공되어 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18).

(3) 대안(개정)

제21조(시험의 방법) ①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중략...

⑤ 제1항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장애가 있는 파견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영역 5: 기타

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1) 상충조항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2) 상충사유

불구(不具)라는 용어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으로써 장애학생을 직·

간접적으로 비하·경시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장애인의 장애를 불구(不具)로 표현하여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대안(개정)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중증의 장애**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대안(개정·삭제·신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기준으로 교육 관련 법령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념·조항들과 상충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5영역으로 대분류하였다.

영역 1은 입학·전학·전입·편입, 영역 2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영역 3은 정당한 편의(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영역 4는 평가·진단·시험, 영역 5는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상충 법령과 개정·삭제·신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5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절 교육에 해당하는 조항, 장애인 차별 관련 국내외 실제 사례 등을 범주화하여 도출된 분석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입학·전학·전입·편입과 관련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입학·전학·전입·편입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올바르게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와 같은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입학·전학·전입·편입과 관련된 정보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학·전학·전입·편입 대상을 법령에 명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의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입학·전학·전입·편입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관련 프로그램·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과 같은 법령에서 교육 프로그램·서비스의 대상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장애 민감성을 높이기 위



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교육시설 접근을 위한 편의, 정보통신기구나 원거리 교육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여 장애인의 교육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기준) 등을 개정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등을 개정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를 개정하여 장애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정보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평가·진단·시험과 관련해서는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평가를 위한 시험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실시되어야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인 한계로 인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의 모의시험,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의 학생평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의 검정고시,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의 진로심리검사 등 다양한 시험·평가에 대한 시험편의를 명문화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와 관련된 부적절한 용어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수 있어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불구, 지체 등과 같은 용어는 장애인의 무능력, 타인의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거나 표출할 수 있어 사용을 금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를 개정하여 불구를 중증장애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다수의 법령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가 잔존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서비스 등이 통합교육의 이념을 내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의 지적·행동발달을 측정하는 중요한 시험·평가도

구가 장애 차별적이기도 하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비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령과 연계되어 있는 조례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의 입학정원 및 입학절차,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의 선발방법, 모의시험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차별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등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동시에 관련 조례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법률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보다 하위 지침을 마련(또는 개정)하는 것이 수시로 급변하는 상황을 조정하기가 더 용이할 때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 개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이 용이한 영역(법률 관련 규정, 규칙 등)을 세부적으로 제정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③항은 교육부 훈령 제19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각 학교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훈령에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학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특수교육 통계. 세종: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6. 20.). 교육 관련 법령 목록. retrived from <http://www.law.go.kr/>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장애차별 결정례집(2008. 4. 11. - 2010. 9. 1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2013).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민권익위원회 (2017. 9. 3.).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많아. retrived from www.acrc.go.kr/
- 김영일 (2010). 시각장애인복지론. 서울: 집문당.
- 김재원, 박종현 (2018). 미국 장애인법.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 대법원 (2018. 6. 19.). 판례 종합법률정보. retrived from 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 매일노동뉴스 (2007. 6. 25.).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않으면 차별 retrived fro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50>
- 민흥기, 김철환 (20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과 상충되는 방송통신, 전자정보 관련법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백은령, 이은미, 윤석진 (20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법령 분석 연구: 여성장애인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5(4): 233-259.
- 비마이너 (2014. 5. 12.). 장애인 검정고시 시험시간은 연장, 쉬는 시간은 ‘축소’ retrived from beminor.com/detail.php?number=6834&thread=04r06
- 서원선, 고아라 (2016).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자격·채용시험의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연구. *장애와고용*. 26(4): 33-65. DOI: 10.15707/disem.2016.26.4.020
- 에이블뉴스 (2015. 5. 12.). 영진사이버대 웹접근성 고려하지 않아. retrived from <http://www.able.co.kr/>
- 에이블뉴스 (2016. 5. 15.). 특교법 제정 10년, 장애학생 차별 수두룩. retrived from <http://www.ablenews.co.kr/>



- 연합뉴스 (2016. 10. 11.). 선생이 ‘가위바위보 지면 장애아와 짝꿍’, 학교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 사례. retrived from www.yonhapnews.co.kr/
- 우주형, 강종건, 윤석진, 박옥순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이수용, 서원선 (2018). 장애인근로자 고용의 질 변화와 영향요인 연구: 한 직장 유지 장애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장애와고용*. 28(1): 105-133.
- 이용복, 최승철, 이준일, 조한진, 박진애, 김지혜, 권미진, 이정현 (2011). 장애인차별 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 개발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7).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서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해동 (2000). 특수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조홍식, 우주형, 조성열, 임성만, 강종건, 송근창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과 상충되는 장애인복지법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중앙일보 (2018. 5. 10.). 부산 올해 첫 검정고시 합격률 76.7%. retrived from news.joins.com/article/22610299
- 최승철, 강경숙, 김주영, 최미선 (2013).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최중옥 (1998). 특수아동의 이해와 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프레스리안 (2007. 1. 18.). 인권위 “청각장애학생 수업에 수화통역 제공해야” retrived fro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82853>
-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장애인 고용 현황.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함께걸음 (2017. 1. 19.). 방통대 수업에 수화통역 지원 않으면 차별. retrived from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7>

Accessibleicon (2018. 6. 11.). The accessible icon project. retrived from accessibleicon.org/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009). U.S. Congress.

- Child Law Advice (2018, 6, 12.).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education, retrived from <https://childlawadvice.org.uk/>
- Delbecq, A., Van de Ven, A., & Gustafson, D.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A guide to nominal groups and delphi process. Glenview, IL: Scott Foresman Company.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18). Test accommodations for test-takers with disabilities.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Murry, J. W. Jr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236.
- Parker, R., & Patterson, J. (2013).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Austin, TX: Pro-ed.
- Patterson, J. B., & Witten, B. J. (1987). Disabling language and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Psychology*. 32: 245,248.
- Rubin, S. E., & Roessler, R. T. (2000).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5th ed.). Austin: Pro-Ed.
- Smart, J. (2015). Disability, society, and the individuals. Austin, TX: Pro-ed.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Disability discrimin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Disability discrimin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Disability discrimin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Disability discrimin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Supreme Court (2017). Fry v. Napoleon Community Schools, 15-497). Washington, DC: U.S. Supreme Court.
- Wikipedia (2018, 3, 12.). About education, retrived from <http://www.wikipedia.com/>



Yuker, H. E., & Block, J. R. (1986). Research with th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Scale (ATDP) 1960-1985. Hempstead, NY: Hofstra University.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1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원선입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관련 법령(교육부 소관) 중 장애인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 및 내용과 상충되는 법령을 조사해 개정·삭제·신설하는 것입니다.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진들이 분석 법령을 선정하였고 1차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에 대해 개정·삭제·신설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델파이 패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각 법령에 대한 개정·삭제·신설안을 읽어보시고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기 중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경우에는 의견을 기초로 재수정하여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재차 타당도를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해 귀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구를 위해 제공하신 인적사항과 의견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법에 의해 일체 비밀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전 화 : 연구책임 ○○○(02-3433-0000) E-mail : *****@koddi.or.kr
----------	---

응답자 현황

1.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2. 연령	만 ()세
3. 근무 혹은 해당 분야 경력	년
4. 장애유무	1) 장애인 (장애 급) 2) 비장애인



1. 영역 1: 입학 · 전학 · 전입 · 편입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상충조항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중략...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상충사유	장애인의 취업률은 10.8%로 비장애인의 취업률 32.1%에 비해 1/3 수준이며 장애인의 고용기회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노무직, 일용직, 제조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양질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이수용, 서원선,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이에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장애에 의한 부수적인 서비스(의료서비스, 보조기기, 사회서비스 등)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Parker & Patterson, 2013). 이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입학 전형료를 면제 혹은 경감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 · 삭제 · 신설)	- 개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중략...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상충조항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충사유	장애인의 고등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을 위한 입학전형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나 계획을 대학이 미리 공개하여 장애학생들이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어 입학전형과 관련된 계획을 명확한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 · 삭제 · 신설)	- 개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u>장애응시생에 대한 관련 정보나 계획 역시 그러하다.</u>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상충조항	<p>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p> <p>...중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p> <p>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p> <p>...중략...</p> <p>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p>	
상충사유	<p>장애(disability)를 의미하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장애(handicap), 손상(impairment), 손실(loss), 질환(disease)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체라는 단어는 주로 지연(delay), 지체(retard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용어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Patterson & Witten, 1987; Smart, 2015).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나 단어의 사용을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체라는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삭제</p> <p>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p> <p>...중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p> <p>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p> <p>...중략...</p> <p>4. 각종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상충조항	<p>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p> <p>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p> <p>1. 지체부자유자 ...중략...</p>	
상충사유	<p>지체부자유자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 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사용이 지속적인 장애로 일반 노동현장에서는 생업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정해동, 2000; 최준옥, 1998). 2018). 과거에 지체부자유자를 영어권에서는 불구(crippled), 신체장애(physically disability) 등으로 칭했으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대신 지체장애(physical disabil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체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atterson & Witten, 1987; Smart, 2015).</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p> <p>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p> <p>1. <u>지체장애인</u> ...중략...</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5)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상충조항	<p>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p> <p>1. 일반 지능 ...중략...</p> <p>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상충사유	<p>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서도 별도의 선발절차의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p> <p>1. 일반 지능 ...중략...</p> <p>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장애학생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상충조항	<p>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p> <p>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중략...</p>	
상충사유	<p>「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강조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5.9%로 비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 68.1%의 1/4정도이다(교육부, 2016). 특히 1998년 이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대학의 입학 기준에 장애학생을 위한 입학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높일 수 있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p> <p>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중략...</p> <p>④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영역 2: 교내 수업활동(수업, 실험, 실습 등), 교외 수업활동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교생활 등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현장)

상충조항	제3조(학교현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중략...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상충사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은 교육 현장에서 접근성이 결여된 교육 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운 교육 시설, 기타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2015).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가능하고 이용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을 학교현장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 (개정 · 삭제 · 신설)	- 개정 제3조(학교현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중략...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8. 장애학생의 교육 개선에 대한 계획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상충조항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중략... 	
상충사유	<p>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경험에 대하여 분석한 강운주, 공마리아(2014)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유무에 따른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에서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 보다 장애학생 학교폭력이 전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에 대하여 장애학생의 66.1%(39명)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었고, 주요 형태는 괴롭힘이나 위협·욕설, 폭행, 따돌림, 성폭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학생은 학교폭력에 취약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u>3.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u> ...중략...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3. 영역 3: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상충조항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상충사유	「교육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특성·상태·환경과는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을 받을 기회나 환경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의해 사회활동·직업 활동·자립생활 등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김영일, 2010; Rubin & Roessler, 2000). 이에 장애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교육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장애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상충조항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충사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 신설)	- 개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3)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충조항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상충사유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무형·유형의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입학, 평가·시험, 교육 시설물, 전자적 교육 정보, 학교생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제17조의7(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의 증진)를 신설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비차별적인 교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신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제17조의7(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상충조항	<p>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중략...</p> <p>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6.21.></p> <p>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p> <p>...중략...</p> <p>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p> <p>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상충사유	<p>장애유아는 비장애유아와 비교해 유아교육 및 기초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이 요구된다. 장애유아의 특별한 필요를 확인하고 그러한 욕구에 상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집중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조사할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중략...</p> <p>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6.21.></p> <p>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p> <p>...중략...</p> <p>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p> <p><u>6. 장애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장애유아교육 지원 현황</u></p> <p>7.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상충조항	<p>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중략...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상충사유	<p>장애인의 취업률은 10.8%로 비장애인의 취업률 32.1%에 비해 1/3 수준이며 장애인의 고용기회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노무직, 일용직, 제조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양질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이수용, 서원선,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이에 장애인의 직업개발·직업훈련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중략...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u>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u> 9.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상충조항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충사유	특수교육 및 일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과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 차별에 대한 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차별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 및 차별 예방·구제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상충조항	<p>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 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p>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상충사유	<p>장애인은 소송·재판 과정 중에 법조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대우 혹은 부당한 판결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몰이해,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판결, 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실제 법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7). 이에 예비 법조인을 양성·교육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소외 계층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신설</p> <p>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 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p>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모의재판을 통하여 학생에게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소외 계층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8)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교육과정) Ⅲ. 편성과 운영

상충조항	Ⅲ. 편성과 운영 1. 편성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중략... 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상충사유	누리교육과정은 5~7세 아동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교육과정으로써 아동의 기초학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주요한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기초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태도를 형성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유·청년기 및 성인기 인식과 차별예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초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Smart, 2015; Yunker & Block, 1986).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Ⅲ. 편성과 운영 1. 편성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중략... 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장애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4. 영역 4: 정당한 편의(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 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상충조항	<p>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p> <p>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p> <p>1. 목적 ...중략...</p> <p>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p>	
상충사유	<p>장애학생이 교육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교육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여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참여와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국가인권 위원회, 2017; 국립특수교육원, 2013; ADA, 20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 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학생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학 교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삭제· 신설)	<p>- 개정</p> <p>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p> <p>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목적 ...중략...</p> <p>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p> <p>12.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편의 제공에 대한 사항</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영)

상충조항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상충사유	원격대학 수업은 주로 방송·통신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강의가 주로 행해지며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적절한 정보통신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웹사이트, 통신망 등의 접근성 미비로 인해 다수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원격대학의 접근성 확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혀 중요하며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이다.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시행령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상충조항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충사유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들이 원격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나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접근 가능해야하며 교육기관은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4)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상충조항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상충사유	2016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 및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0.2%에 그치던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는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에이블뉴스, 2016).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5)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상충조항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중략...	
상충사유	원격대학을 통한 평생교육은 주로 방송·통신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강의가 주로 행해지며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적절한 정보통신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웹사이트, 통신망 등의 접근성 미비로 인해 다수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원격대학의 접근성 확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혀 중요하며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이다.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 가능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6)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상충조항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중략...	
상충사유	언론매체를 통해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장애학생이 이용 가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u> ...중략...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7)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상충조항	<p>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상충사유	<p>학교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접근이 결여된 체육시설, 체육 교재·기자재 등으로 장애학생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삭제·신설)	<p>- 개정</p> <p>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육시설)

상충조항	제10조(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 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상충사유	장애학생이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세미나실 등과 같은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시설에 접근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립특수교육원,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신설 제10조(교육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9)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상충조항	<p>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중략...</p>	
상충사유	<p>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에 의하면 시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처럼 장애교원이 연수 및 훈련을 받는 경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p>	
대안 (개정 · 삭제 · 신설)	<p>- 신설</p> <p>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연수, 그에 필요한 시설, 교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중략...</p>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10)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상충조항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중략...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중략...	
상충사유	사이버대학 수업은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강의가 주로 행해지며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적절한 인터넷 및 웹사이트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웹사이트, 통신망 등의 접근성 미비로 인해 다수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사이버대학의 접근성 확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혀 중요하며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이다.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해야한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중략...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u>10.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u> ...중략...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1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상충조항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중략...	
상충사유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통신 교육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신설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5. 영역 5: 평가 · 진단 · 시험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상충조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중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중략... ⑧ 시 ·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1.28.>	
상충사유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당한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에 맞는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은 최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장애학생과 비교해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서원선, 고아라, 2016; ADA, 2009).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서도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2018). 특히 모의시험의 경우에도 장애학생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 (개정 · 삭제 · 신설)	- 개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중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중략... ⑧ 시 ·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모의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학생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상충조항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상충사유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여러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주요한 방법으로써 적절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능력, 잠재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 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적절한 편의가 동시에 제공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 신설)	- 개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u>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상충조항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충사유	장애인 중 중증장애, 중복장애, 기타 장애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경우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위를 수료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교육시설,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장애인 교육에 대한 가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일부 장애인들은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다(비마이너, 2014; 중앙일보, 2018). 이에 검정고시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장애인응시생을 위한 시험편의와 더불어 일시·장소 등을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고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장애인응시생을 위한 시험편의 및 관련 시행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4) 「진로교육법」 제10조(진로심리검사)

상충조항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충사유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맞는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진로심리검사는 장애의 종류, 중경증 정도, 검사의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어야함과 동시에 정당한 편의로써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Parker & Patterson, 2013).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u>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 중경증 정도, 검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진로심리검사를 선택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u>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상충조항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상충사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써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장애인과 같은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역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과정 중 적성시험에 대한 편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장애학생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장애학생이 적성시험을 볼 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성시험을 보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6) 「교육공무원법」 제16조(신체검사)

상충조항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충사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16조에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장애가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장애가 있는 교육공무원이 신체검사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추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 · 삭제 · 신설)	- 개정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교육공무원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험의 방법)

상충조항	제21조(시험의 방법) ①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중략...	
상충사유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참여해야하며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장애에 따른 적절한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구체적으로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연장, 대체시험지 제공, 시험보조인력 제공 등의 시험편의가 제공되어야하며 실기시험의 경우 보조기기 사용, 시험유형의 조정 등과 같은 시험편의가 제공되어 장애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18).	
대안 (개정 · 삭제 · 신설)	- 개정 제21조(시험의 방법) ① 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중략... ⑤ 제1항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장애학생에게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6. 영역 6: 기타

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상충조항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상충사유	불구(不具)라는 용어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애학생을 직·간접적으로 비하·경시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장애인의 장애를 불구(不具)로 표현하여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개정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u>장애 또는</u>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상충조항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중략...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상충사유	장애인의 교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장애인 교원특별채용과 같은 제도적 지원으로 다수의 장애인들이 교육영역에서 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 중 지원이나 처우가 불충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한 지원이 제공되기도해 일부 장애인이 채용과정 중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장애교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에 장애인의 채용과 관련해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제11조의6(장애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안 (개정·삭제·신설)	- 신설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중략... 제11조의6(장애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장애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장애응시자가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②타당하지 않다	사유 :
	③보통	사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2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2차적으로 수정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6개의 재차 수정된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선택지에서 타당 정도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① 매우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를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전 화 : 연구책임 ○○○(02-3433-0000)
E-mail : *****@koddi.or.kr

응답자 현황

1.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2. 연령	만 ()세
3. 근무 혹은 해당 분야 경력	년
4. 장애유무	1) 장애인 (장애 급) 2) 비장애인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1차 조사 후 수정방향	대학입학과 관련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함.(1차 평균점수: 3.6)	
상충조항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를 가진 응시생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②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③보통	이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2.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1차 조사 후 수정방향	'장애학생'은 법률상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다른 대상 역시 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으로 수정함.(1차 평균점수: 3.7)	
상충조항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중략...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중략...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선택지	①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②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③보통	이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학교현장)

1차 조사 후 수정방향	단위 학교에 '장애학생의 교육 개선에 대한 계획'이란 명칭 보다는 '통합교육 계획'이라는 용어로 수정함.(1차 평균점수: 3.1)	
상충조항	제3조(학교현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중략...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개정안	제3조(학교현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중략...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8. 통합교육에 관한 계획	
선택지	①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②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③보통	이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1차 조사 후 수정방향	모의재판 과목은 재판실무를 배우는 과목으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에 적합한 과목이 아니어서 장애 이해, 인식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도록 조항을 수정해 각 호의 내용을 추가함.(1차 평균점수: 3.0)	
상충조항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를 통하여 학생에게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소외 계층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②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③보통	이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5.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1차 조사 후 수정방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수업의 운영)을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으로 수정 원격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해야하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기 보다는,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을 수정하였음.(1차 평균점수: 2.8)	
상충조항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 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개정안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 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④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②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③보통	이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6.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1차 조사 후 수정방향	'장애평등'을 '장애차별금지'로 '추진 계획'을 '실적'으로 수정하였고 다소 과도한 제1항을 삭제하였음.(1차 평균점수: 3.2)	
상충조항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중략...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개정안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중략... 제11조의6(장애차별금지를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택지	①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②타당하지 않다	이유 :
	③보통	이유 :
	④타당하다	
	⑤매우 타당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발 행 일 : 2018년 10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 · 인쇄 :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ISBN 978-89-6921-292-4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